

지방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 본격화

한창섭 차관 주재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반 구축·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설정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인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축하고 규제 권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가지로 추진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공원·수도 등 부대시설 설치 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건축물 증설 시 용적률·건폐율 제한과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 증설 관련 규제도 풀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과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는 개선한다. 개선이 시급하거나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와 관계부처의 협장 방문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개선한다.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등 그림자 규제와 인허가 신청·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게

된다. 우수 개선 사례는 격월로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

출판문화진흥원-책마을 해리, 농촌 독서문화 활성화 '맞손'

공동세미나·농촌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독서환경 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고창 책마을해리(총장 이대건)가 농촌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출판문화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출범하여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북 혁신도시 13개 이전기관 중 전북지역 마을단위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지역 인문학 가치 창출'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타 이전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고창 책마을 해리는 농촌지역 폐교(나선초등학교)를 활용해 책마을과 책학교, 박물관, 도서관을 일구는 공동체로 농촌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마을이다.

8.3 고창 책마을해리 책 학교에서 진행된 자매결연 행사는 도농융합 상생교류 활성화와 지역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식과 함께 '농촌 인문학 가치창출 방안'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특히, 금번 자매결연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농촌마을이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자는 최초의 협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준희 원장은 "농촌지역의 인문학 가치창출과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출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